

프랑스 도서유통 과정의 현황

(재)한국출판연구소 주최 제13회 출판포럼 열려

뱅상 마르티

프랑스 도서수출공사 전무이사

(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지난 10일,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준호)와 공동주최로 <프랑스의 도서유통>을 주제로 한 제13회 출판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 도서수출공사(Centre d' Exportation du Livre Français)의 전무이사 뱅상 마르티씨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나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파트릭 라이양디에(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협력 참사관)씨를 비롯하여 김종수(한울 대표)·박철준(전 도서신문 기자) 등 지정토론자 및 김경희(파주출판단지조합 유통위원장), 허창성(한국출판유통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프랑스 출판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르티씨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1997년 프랑스 출판계는 총 23억3천5백만 달러(한화 약 3조3백억원)의 매출액(상세 내역 표 참조)을 올렸으며 총 4만7천여종이 출간됐다. 한편 당 평균 발행부수는 8천7백97부였는데 프랑스에 있는 6~7천개의 출판사 중, 3백11개 출판사가 이 매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출판계는 아쉐트와 아바스의 두 그룹이 거의 모든 분야 도서를 발행하며 전체 매출액의 60~70%를 차지한다. 그 외 독립적인 출판사들은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데 자체 유통망이나 경제적인 혜택도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출판사는 10여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 출판사들에게 합병되고 있다.

81년 '방법' 통과로 도서정가제

1981년 좌파집권의회에서 도서정가법인 '방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자유가격제였는데, 프낙이나 까르푸 같은 대

형매장에서는 순환이 빠른 책만 20~40% 할인해서 팔았다. 대형매장은 총 매출액의 80%까지 독점할 수 있었고 전시장과 전문 관리인을 갖춘 8, 9천 여개 서점은 이들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도서정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몇년간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형매장이 있었지만, 언론의 지속적인 계도 과정과 일련의 법적 대응을 거쳐 시정 됐다. 특히 <리브르 앱도>와 같은 출판전문 언론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됐다.

도서정가법에도 몇가지 예외는 있다. 출간된 지 2년이 넘은 책과 서점에 입고된 지 6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법에서 제외되고, 표지에 인쇄된 정가의 5%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입할 때나 개인이 북클럽을 통해 구입할 때도 할인이 가능하다. 북클럽의 경우에는 직접 책을 제작하고, 출간된 지 9개월이 흐른 뒤에만 구입이 가능하다.

각 나라마다 정가제가 다르므로 유럽연합이 등장하면 정가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로화폐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에도 저가 도서는 존재한다. 일반 도서의 가격은 1백프랑(약 2만원) 내외지만, 저가 도서의 경우에는 10프랑이다. 개인적으로 저가 도서의 생산이 독서진흥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출판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에서 독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례는 불어를 공부하는 저개발 국가 학생을 위해 교재값을 할인해주는 정도다.

1997년 프랑스 출판 분야별 매출

분야	매출액
판권 수입	7천6백만
CD롬 매출	2천3백만
학습 교재	3억6천5백만
기술, 의학, 인문	3억9천5백만
사전류	1억3천
문학	3억
예술	9천
만화	6천5백만
실용	3억7천만

단위는 미국 달러.

전체 80%가 컴퓨터 시스템의 주문·발송



<프랑스의 도서유통>을 주제로 지난 10일 열린 출판포럼.

프랑스 출판유통은 출판사에서 대리인을 두고 신간의 출간 사실을 각 서점에 홍보하는 '보급'과 서적의 물리적 이동 관리를 뜻하는 '유통'으로 나뉜다. 유통 역시, 아쉐트와 아바스 등 대규모 그룹이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통 시스템은 출판사의 대리인이나 보급업자가 새책을 홍보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서점은 이들의 홍보자료를 보고 책의 ISBN 번호와 물량을 전산자료전송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주문서에 따라 발송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주문·발송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운송수단은 서점이 선택하는데, 파리에는 12개의 운송업체가 있다. 출판사는 운송비의 95%를, 서점은 5%를 부담한다. 유통업체가 출판사에서 받는 기본 할인율은 30~35%(문학관계서적 기준)이다. 할인율은 책의 수량에 따라 다른데, 최고 55~60%에 달하기도 한다. 서점이 받는 평균적인 할인율은 약 10~12% 정도이다. 최근에 정착된 전산시스템은 신간자동발송시스템이다. 주문서 없이 신간이 발송되기 위해서 연초에 출판사와 서점은 '문학신간 10권, 예술신간 5권'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의 새책이 나오면 각 서점에 계약한 물량을 자동적으로 보낸다. 이 신간서적의 반품과 지불은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다. 신간서적의 반송율은 약 10%정도. 할인율의 폭은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크거나 작아진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출판사들은 많은 책이 서점에 진열되기를

원하고 유통업자들 역시 물량이 많아야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강제적으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임여분은 고스란히 반품되어 온다. 때로 정가의 70% 까지 반품비용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출판사는 이 유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새책을 과잉생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이익율이 적은 저가도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항상 출판사와 서점은 반품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대개 25% 정도의 반품율을 보이지만, 불황일 경우, 40%까지 치솟는다. 이 비용은 출판사가 지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 않거나 한정된 기간에 10%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이익을 준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데도 반품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 신간자동발송시스템을 약용하는 경우, 둘째 책이 갈수록 덜 팔리기 때문, 셋째 베스트셀러가 되어 갑자기 물량이 증가했다가 급속히 빠지는 경우, 넷째 교재가 바뀐 줄 모르고 많이 공급한 경우 등이다. 프랑스 출판계는 지난 3년간 5~6%의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하지만 책 가격이 2~2.5% 인상되었기 때문에 매출액은 비슷하다. 신문·잡지·TV 등 다른 매체들의 영향으로 도서구매 양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판의 위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오지 않았다. 프랑스 국민들은 1년에 2.4권의 책을 구입한다. 구입율이 낮은 이유는 도서관에서 무료대출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유료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정리·김연수 기자